

# HR 브리프 VOL.20 · 10월 두 번째 호

차재원 노무사

<https://chanomusa.com/insights/hr-brief>

2026.10.16



# 인사노무 ONE-POINT Lesson

## 제출된 사직서, 언제까지 철회가 가능한 것일까?

### 1. 개요

직원이 상사와의 갈등 등으로 핫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다음 날 마음이 바뀌어 퇴사를 무르고 싶다고 나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이미 제출했으니 끝이다'라며 퇴사 처리를 강행할 경우, 사직 의사표시의 성격과 수리 시점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가 아니라 부당해고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2. 법적 해석(사직 의사 철회의 한계)

사직서가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해 달라는 청약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회사의 승낙이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정 시점에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일방적 해지 통고라면 회사의 동의 없이 철회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문구, 제출 경위, 취업규칙상 결재 절차, 회사의 수리·통보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3. 사업장 운영방안

불필요한 번복과 해고 분쟁을 막으려면 사직서 수리 절차와 최종 결재권자를 취업규칙이나 내부 지침에 명확히 두어야 합니다. 사직서 제출 즉시 면담으로 진의를 확인하고, 최종 승인 뒤에는 근로자에게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로 '사직서 수리 완료 및 퇴직일 확정'을 통보해 도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철회 요청이 들어오면 일방적 사직 통고인지 합의해지 청약인지부터 검토한 뒤 처리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동향

### 김영훈 '메가특구 노동특례 신중히...정년연장 법안 연내 처리돼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메가특구의 연구개발직 주 52시간 상한 예외에 대해 생산성과 노동자 건강권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의 연구개발 인력 과로 문제와 사후 점검 부족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김 장관은 장시간 노동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과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미 충분히 진행됐다고 관련 법안이 연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국회 논의 상황을 보며 정년 연장 정부안을 조속히 제시할 방침입니다.

### 청년 프리랜서 3명 중 1명 우울 의심군... '일하는사람기본법' 입법 추진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감을 얻는 청년 프리랜서 462명 조사에서 30.3%가 우울 의심군으로 나타났습니다.

낮은 보수와 야간을 포함한 장시간 노동, 불안정한 일감이 우울감과 연관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응답자의 55.2%는 인공지능 확산으로 일감을 잃을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17.5%에 그쳐 청년 프리랜서가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밖의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일하는사람기본법'의 연내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노동계 동향

###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11월 선거로 조합원 의사 묻겠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기구 복귀 여부를 11월 지도부 선거를 통해 조합원에게 묻기로 했습니다.

앞선 임시대의원대회는 반대 측 대의원들의 이석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론 없이 유회됐습니다.

양경수 위원장은 모바일 대의원대회를 다시 열기보다 전체 조합원의 선택을 받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자체 설문에서는 응답 조합원의 87.8%가 사회적 대화에 긍정적이라고 답해 대의원과 조합원 사이의 인식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차기 위원장 후보들의 공약과 선거 결과에 따라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큼니다.

### 노사정, '법인 택시 노동환경' 조사한다...티에프 첫 회의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법인 택시 노동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노사정 티에프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티에프에는 택시업종 노동계와 경영계, 노사정 추천 전문가가 함께 참여합니다.

택시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택시발전법은 서울에서 시행 중이지만 전국 시행은 유예된 상태입니다.

전국 시행 시기를 2028년으로 다시 미루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노동시간 산정을 둘러싼 노동계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티에프는 기존 조사와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노사 의견을 수렴해 실태조사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 경제·노동 단신

### ‘영업익 5% 과징금’ 산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년 동안 산업재해로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영업이익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반복 중대재해 사업장에는 노동부 장관이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하청 노동자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원청에도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폭염·한파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산재 신고 포상금, 하청까지의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의무도 포함됐습니다.

### ‘납 배출 주사’를 비타민으로 속인 배터리 제조사...노동부, 경찰 수사 의뢰



한 자동차 배터리 제조사가 노동자에게 중금속 배출을 촉진하는 킬레이션 주사를 비타민 주사라고 설명하고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특수건강검진에서 유해물질 노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위였는지 확인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노동부는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68건을 적발해 입건·송치하고 과태료 46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같은 업종 사업장 14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도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유해물질 노출 실태와 투약 경위, 건강검진 결과 은폐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판례 및 판정례 등

### [단독] 복직 합의 뒤집은 대우버스, 대법원 '미이행 합의는 무효'



자일대우버스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철회와 조기 복직을 조건으로 해고기간 임금 일부를 포기하고 회사의 행정소송 취하 등에 합의했습니다.

회사는 약속한 실업급여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부당해고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도 취하하지 않았습니

다. 노동자들은 복직 합의의 핵심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이라며 합의를 해제하고 포기했던 해고기간 임금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이행하지 않은 의무가 합의의 주된 채무에 해당하므로 합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자 1명의 연·월차휴가수당 산정 부분은 추가 심리를 위해 파기환송됐습니다.